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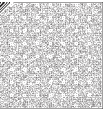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5.10 ~ 2020.5.9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20. 5. 9



발간사

문재인정부 3년 차, 국민과 나는 대통령의 연설을 모았습니다. 매우 역동적이었고, 국민의 단결된 힘이 간절히 필요했던 하루하루의 역사이고 기록입니다.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마음이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지난해 우리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년을 맞으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한 도전으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뤄냈고, 3·1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국민께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준 덕분입니다. 정부는 신산업의 활성화와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노사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힘을 모아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포용국가의 희망을 보았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DMZ 평화의 길’이 열려 국민이 남북화해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진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 활발한 국제외교를 펼쳤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주신 국민이며, 검사와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일 것입니다. 연설문 곳곳에는 우리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 또한 높은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우리 국민께 발간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은 2019년 5월 10일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의 주요 연설, 회의와 행사의 발언, SNS 메시지를 수록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 연설문집은 대통령의 말씀을 떠나 국민의 생생한 이야기, 삶의 현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언제나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남은 2년, 국민의 하루하루를 성실히 기록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음성변환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사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차례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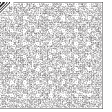
2019. 5. 13	수석·보좌관회의	……	8	2019. 8. 19	수석·보좌관회의	…	50
2019. 5. 14	제19회 국무회의	…	12	2019. 8. 29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52
2019. 5. 20	수석·보좌관회의	…	15	2019. 9. 10	제39회 국무회의	…	57
2019. 5. 29	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2019. 9. 16	수석·보좌관회의	…	61
	제21회 국무회의	…	17	2019. 10. 7	수석·보좌관회의	…	64
2019. 6. 3	수석·보좌관회의	…	20	2019. 10. 8	제43회 국무회의	…	67
2019. 7. 2	제26회 국무회의	…	23	2019. 10. 14	수석·보좌관회의	…	69
2019. 7. 8	수석·보좌관회의	…	25	2019. 11. 11	수석·보좌관회의	…	71
2019. 7. 15	수석·보좌관회의	…	28	2019. 11. 12	제48회 국무회의	…	74
2019. 7. 16	제28회 국무회의	…	31	2019. 12. 2	수석·보좌관회의	…	77
2019. 7. 22	수석·보좌관회의	…	34	2019. 12. 3	제51회 국무회의	…	80
2019. 8. 2	제31회 임시 국무회의		38	2019. 12. 16	수석·보좌관회의	…	84
2019. 8. 5	수석·보좌관회의	…	42	2019. 12. 17	제53회 국무회의	…	88
2019. 8. 12	수석·보좌관회의	…	45	2019. 12. 30	수석·보좌관회의	…	91
2019. 8. 13	제34회 국무회의	…	47				

2020년

2020. 1. 20	수석·보좌관회의	…	96	2020. 3. 17	제13회 국무회의	…	123
2020. 1. 21	제3회 국무회의	……	99	2020. 3. 31	제16회 국무회의	…	126
2020. 2. 3	수석·보좌관회의	…	102	2020. 4. 13	수석·보좌관회의	…	129
2020. 2. 4	제5회 국무회의	……	105	2020. 4. 14	제18회 국무회의	…	132
2020. 2. 10	수석·보좌관회의	…	108	2020. 4. 20	수석·보좌관회의	…	136
2020. 2. 18	제7회 국무회의	……	111	2020. 4. 27	수석·보좌관회의	…	139
2020. 2. 24	수석·보좌관회의	…	114	2020. 4. 28	제22회 국무회의	…	143
2020. 3. 3	제9회 국무회의	……	117	2020. 5. 4	수석·보좌관회의	…	147
2020. 3. 9	수석·보좌관회의	…	121				



2019



수석·보좌관회의

2019. 5. 13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2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쉽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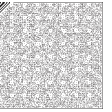
우리는 지난 70년 세계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취는 아직 구멍 뚫린 데가 많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에서 헤쳐 나올 수 없습니다. 반칙과 특권, 편법과 탈법이 당연시되어온 불공정의 익숙함을 바로잡지 않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립하고 반목하는 대결구도의 익숙함을 그대로 두고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 2년,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역동성과 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도전에 맞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아이에 대한 투자와 어르신 지원, 치매국가책임제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습니다.

전쟁 위협이 상존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었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일관되게 평화의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70년 냉전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오며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평화가 더 확고하게 정착된 나라, 일을 하고 꿈을 펼칠 기회가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신 한반도 체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잘 해주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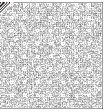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노력과 함께 정부 스스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책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수혜자거나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대화와 소통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부터 시작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습니다. 평가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시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염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배를 타고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국민께 앞으로 3년을 다짐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국무회의

2019. 5. 14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까지 더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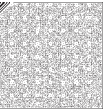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의 합의로 2018년 8월 구성되고 11월에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협치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개회는 정국 상황이 좋은 나쁜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미세먼지 감축,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급합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입니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입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습니다. 안보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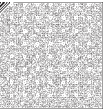
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정당 대표들과 만남이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9. 5. 20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 복제 바이오의약품) 세계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네 배로 늘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헬스산업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관리기준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대응 예산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민께서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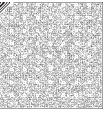
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제21회 국무회의

2019. 5. 29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확장해 전통적인 군사적 요인에 더해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요인까지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국가안보의 목표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보호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포괄안보의 개념을 처음으로 연습에 적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 국민께서 함께 참가하는 이번 연습은 전시대비 연습으로만 진행하던 을지연습과 달리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 위기대응 연습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시대비 연습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해오던 태극연습과 통합하여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연습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날 안보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전쟁뿐 아니라 대규모 재난, 테러, 질병 등 비군사적 요인도 국가안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포항 지진, 조류독감과 구제역, 메르스, 강원도 산불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개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은 그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하나의 재난에서 시작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연습이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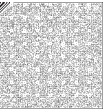
전시대비 역량 강화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입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대화를 통한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지만 틈틈한 안보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전시대비 연습은 공격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의 연습이며, 특히 한국군 단독훈련이므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더라도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연습 종료 후에는 평가 결과를 위기관리계획과 총무계획에 반영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을지태극연습이 국가 위기대응과 전시대비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기밀 유출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리당락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한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9. 6. 3

헝가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시간에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로서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안타까운 상황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구조와 수색에 제약을 받고 있어 더욱 애가 탑니다. 가족들께서 기운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과 피해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외교채널과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사고원인 규명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피해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 가족들이 구조와 수색 상황을 몰라서 애태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는 확인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부정확한 보도로 곤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에 있는 가족들의 경우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지

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마음을 써 주기 바랍니다. 사망자 시신의 국내 운구와 장례 지원, 생존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들도 성의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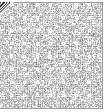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있는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구조·수색 장비를 지원해준 오스트리아와 체코 정부, 수색에 공조하고 있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하류 지역 국가 정부에도 감사드립니다. 헝가리 현지와 국내 파견구조대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계기에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들어 해외공관의 영사 조력 업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후 조력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6월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큼니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대내여건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활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특히 추가경



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 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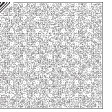
제26회 국무회의

2019. 7. 2

지난 일요일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 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에 앞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전방 GP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군사합의 이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긴장되었던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워진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



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고, 아울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작업에서 발굴된 유품들을 함께 참관했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보와 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정상들 간의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기존의 외교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 못지않게 정치·외교에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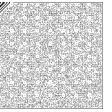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19. 7. 8

세계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재정의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최근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도 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입니다. 어려움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합니다. 제조업 발전은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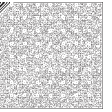
우리 정부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후발 국가로서 초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도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소재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계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 나서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9. 7. 15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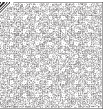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실제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 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



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자신감 있게 이 상황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왕에 추진해 오던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습니다.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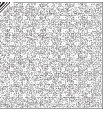
제28회 국무회의

2019. 7. 16

지금 이낙연 총리님은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이 총리님은 지난해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달까지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하여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 실질 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땀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two-top) 체제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제가 어제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같습니다.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누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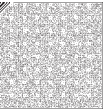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의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총리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글라데시는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서남아시아의 주요국입니다.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 분야의 실질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지난 4월 저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어 이번 총리의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카타르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국가로, 경제협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난해 저의 UAE 방문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균형 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마찬가지로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

인 관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 실질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9. 7. 22

태풍 다나스(DANAS)가 일찍 소멸되어 다행이지만 강풍과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폭염도 지난해보다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개정된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어업과 축산업 피해예방대책을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식품·교통·물놀이 안전 등 정부가 세운 여름철 생활안전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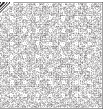
세계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에서 수출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 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 수

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께서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회 일주일을 남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주신다면 대회 흥행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 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 원 정도였다가 지난해 1조 6,000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1조 9,000억 원으로 최고치를 크게 경신했습니다. 벤처투자 중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 기업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큼니다. 벤처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유니콘기업 수도 1년 만에 세 개에서 아홉 개로 세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유니콘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 매우 빠른 성장속도입니다. 단시일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면서, 정부가 제2벤처 붐 조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는 세계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제2벤처 붐을 통한 혁신창업국가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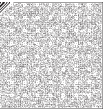
이제 제2벤처 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초일류 창업국가를 위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 원 규모의 신규 벤처투자 달성 등 제2벤처 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

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31회 임시 국무회의

2019. 8. 2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입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 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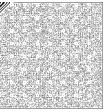
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 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협력과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수입처와 재고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께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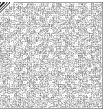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9. 8. 5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대응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2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 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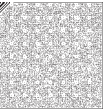
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 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그 토대 위에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국 국민께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큼니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



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 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경제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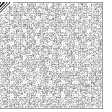
2019. 8. 12

사흘 후면 광복절입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습니다.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 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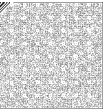
제34회 국무회의

2019. 8. 13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합니다. 지난달 무디스(Moody's)에 이어 며칠 전 피치(Fitch)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



게 변화하는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정부부터 의사 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투자·소비·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생활 SOC 투자는 상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 수단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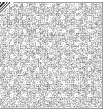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 빈곤층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

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돌봄정책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거나 대외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개각이 발표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님들과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9. 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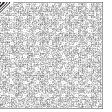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70년이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

야 할 것입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2019. 8. 29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堂堂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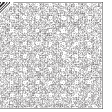
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AI 지원 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



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기업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일자리에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되었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시의 재정투자가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 성장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출 지원 무역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

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예산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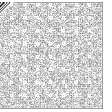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무기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방위산업이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4대 강국과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도 확대했습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74만 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 대상을 대폭 늘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국민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합



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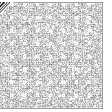
제39회 국무회의

2019. 9. 10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짐하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한 후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科學立國 技術自立)’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철강·조선·반도체·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입니다.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과제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



입니다. 제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과제로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국산화와 공급안정성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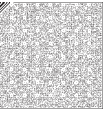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소재부품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 4,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확정했습니다.

둘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제품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수요·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세제·금융·입지·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강력한 추진체제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주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조기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태국과는 한국전 참전국의 우의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신성장 전략과 태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연계하며 첨단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미얀마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 단지가 그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빈 방문한 라오스



에서는 수자원 협력 확대와 농업·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라오스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은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아세안과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는 땀 수 없는 친구입니다. 아세안과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치면서 한·아세안이 함께 잘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을 보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중심의 평화·번영공동체로서 한·아세안의 미래도 함께 그렸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인 부산시와 모든 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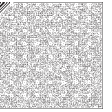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19. 9. 16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지표1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 왔습니다. 최고의 민생은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에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정책과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



겠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대응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 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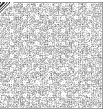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져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어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 왔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9. 10. 7

태풍 피해가 심각합니다. 인명 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습니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피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가을 태풍은 늘어날 전망이고, 집중호우도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고가 큼니다.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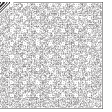
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농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김포·파주·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 협의와 북측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쳐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군 헬기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질병관리가 쉬운 스마트축사 등 축산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더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가공 등 관련 산업의 수출과 관광산업, 소비 위축 등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정부는 선제적 방역과 발 빠른 대응으로 매년 발생하던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께서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피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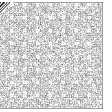
제43회 국무회의

2019. 10. 8

세계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큼니다.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자립화, 대·중소 상생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아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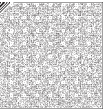
2019. 10. 14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더욱 실효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피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께서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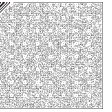
2019. 11. 11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 격려와 질책에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벤처 붐 확산 등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 나가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등 맞



층형 복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4강 외교를 강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신남방·신북방으로 교류·협력과 경제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국민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할 것입니다.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말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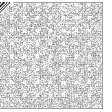
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 없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적 같은 변화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성공시켜 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반, 국민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입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와 다짐이 더욱 굳고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지지가 힘입니다. 국민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국무회의

2019. 11. 12

오는 11월 25일부터 이곳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한·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외교행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백범김구기념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이은 세 번째 현장 국무회의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 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출범 이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처음으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는 외교, 경제, 인적·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에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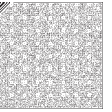
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상생번영·평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한 기반도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이를 재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확대 의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 역시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포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이 타결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큼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3분의 1,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입니다.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증진은 필수입니다. 이 점에서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입니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입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잠재력도 매우 큼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은 자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그동안 외교장관회의로 개최해온 것을 정상회의로 격상



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메콩지역 국가 순방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각 부처와 부산시에서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행사를 앞두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됩니다.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전략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행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아세안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이며 지속가능한 협력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이곳 부산은 아세안으로 향하는 바닷길과 하늘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께도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서, 다채롭게 마련된 부대행사에도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 함께 즐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교행사이면서 우리 국민과 아세안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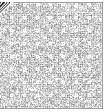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19. 12. 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아세안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정부 부처와 부산시, 관계기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께서 큰 관심으로 함께해 주셨고, 여러 불편함을 견디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산시민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를 찾은 각국 정상들과 손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습니다.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고, 경제·사회·문화·평화·안보·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큼니다.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기존의 한·아세안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더 나아가 양자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제조업부터 첨단 과학기술산업, 금융, 스마트시티,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농업,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폭과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세안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는 최초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메콩 국가들의 잠재력과 우리의 경험의 합쳐질 때 함께 나눌 무궁무진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늘수록 한·아세안 관계의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비자제도 개선과 항공 확대, 청년 교류와 한국어교육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치안 협력 등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큼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습니다.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 방산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신남방정책은 본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의 가장 큰 동력도, 아세안과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어줄 가장 단단한 힘도 존중과 배려, 이해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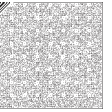
리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락을 우선 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께 소중한 법안들입니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 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51회 국무회의

2019. 12. 3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등 세 분의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습니다.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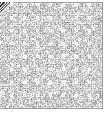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합니다.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직원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합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합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3개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년 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됩니다. 드디어 국가소방 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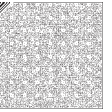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큼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에 대형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합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도 단위의 광역대응체계를 국가 단위의 총력대응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역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등 더욱 효율적인 재난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

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9. 12. 16

‘장 발장 부자(父子)’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흔쾌히 용서해준 마트 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일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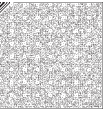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처해 왔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어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으로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청년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픕니다.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의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합니다.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가계소득과 분배에서의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가장 저소득 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되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가계소득동향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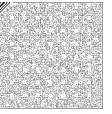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우리 경제 미래의 큰 희망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혁신창업과 제2벤처 붐 확산은 아주 든든한 흐름입니다. 신규 벤처투자액이 올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신설법인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창업기업 중에서도 기술창업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유니콘기업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큼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3개였던 유니콘기업이 11개

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해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유니콘기업 수로 세계 6위이며, 세계 5위인 독일과 한 개 차이로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업계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플랫폼 기업과 ICT 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열한 번째 유니콘기업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할 만합니다. 유니콘기업의 확산은 혁신성장정책 성공의 상징입니다. 정부는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정책으로 유니콘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모태펀드와 스케일업펀드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유니콘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탄생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생명공학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니콘 후보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53회 국무회의

2019. 12. 17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회의입니다. 세종청사에 계시는 장관님들도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됩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입니다. 예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안전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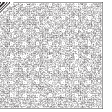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듭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특히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작년과 비교해 33%, 화물차·버스·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 사망사고는 16% 줄었고, 대표적인 안전사고로 꼽혔던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을 비롯해 산업재해 사망도 건설업·제조업·운수업·창고업 등 전 업종에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입니다.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3대 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이스(Black Ice) 사고입니다.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긴급 점검하여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빈발하는 선박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간 정부는 작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고, 지난주에는 발전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입니다. 한 발을 내디더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더 집요하고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은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재난에서부터 생활 속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 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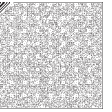
2019. 12. 30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곳곳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 없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되삼을 수 있었습니다.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 가치의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제도의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



라보고 의지를 기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불쌍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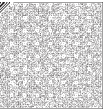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께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자영업자·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월 30만 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입법이 안되고 있어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불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 주시

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2020



수석·보좌관회의

2020. 1. 20

설 연휴가 예년보다 이릅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국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께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로서도 민생·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전입니다.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입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공통된 예측입니다.

자동차산업은 작년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든 가운데서도 SUV·친환경차 등 고가 차량의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조선업은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대부분을 수주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 수주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작년보다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년간 생산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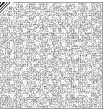
수출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에 좋은 흐름입니다.

위축되었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겠습니다.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 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고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가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여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



부는 포용성 강화가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장의 토대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저소득층 소득 증대,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가처분소득 확대와 의료비 등 필수생활비 절감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우리 사회의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기초연금도 이번 주부터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이달부터 40%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확대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려운 이웃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서민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편안한 귀성길이 되도록 특별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연휴 기간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화재와 산재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24시간 안전대응체제로 모든 국민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제3회 국무회의

2020.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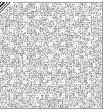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



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할 「통합경찰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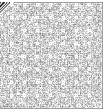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여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2. 3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방역 당국과 수많은 의료진이 방역 현장 최전선에서 밤낮을 잊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검사법 구축에 성공함으로써 검사 단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응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한 진천·아산 지역주민들의 포용정신과 우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영사관과 한인회를 중심으로 서로를 도운 교민들의 상부상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한 시민의 목소리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으면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경보는 아직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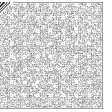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망에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불안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무증상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와 무증상자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작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관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학회와 의료계의 역량을 함께 모으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인 동시에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들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국민의 자가격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구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격리나 의료계의 참여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치르는 희생에 대한 보상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과 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보다는 국민안전을 우선에 두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축적된 경험과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불안감을 이용하여 불신을 퍼뜨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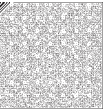
제5회 국무회의

2020. 2. 4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국무회의로 개최합니다.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이시종 충북지사님, 양승조 충남지사님 네 분의 광역단체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로 네 분이 참석하셨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전면에 나서 심각 단계에 준해 비상하게 대응하고 있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도,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습니다.

한편 이번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공공기관과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



는 민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염병 연구와 예방,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소비와 관광·문화·여가 생활에 지장을 주며 평범한 국민의 일상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해외여행의 발길도 끊고 있으며, 부품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과 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당하면서 헤쳐 나가야 할 일입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하루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어 주고 기업들의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업종별·기업별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과 판로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한 부품·소재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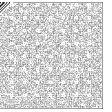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길을 넓혀 주는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산업과 관광·서비스업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심을 잡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합니다. 재정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민간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할 것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내 부처 간 협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듯이 이번의 비상한 상황에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회복의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잘못된 정보에 바르게 대처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2. 10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을 수상했죠.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 알 수 있고, 국가의 진짜 역량도 어려움에 처할 때 드러납니다. 국가의 대응 능력이 국력이고, 국민의 시민의식이 국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수준을 높이며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모든 분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를 중국 입국자 전체로 확대했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개강 연기 등 유학생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학생들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격리병실이나 선별진료소 등의 확보와 함께 군과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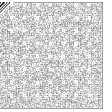
금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나 시장 교란행위, 가짜뉴스 유포 등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입니다. 조기진단이 가능한 시약을 개발해 민간 의료기관까지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조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 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는 중증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의료진들의 역량도 뛰어나 신종 코로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 명의 확진환자가 완치돼 퇴원했고, 다른 확진환자들도 모두 안정적이어서 퇴원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갖고 국민행동수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께서 자신의 보호는 물론 상대의 안전도 지킨다는 자세로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실천이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따뜻한 온정도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교민들이 격리된 시설에 격려의 편지와 후원물품, 자원봉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공용공간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독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훈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국민이 우



리의 희망입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일 다시 한번 중국에 임시 항공편을 보내 우한에 남은 우리 국민과 가족들을 모셔올 예정입니다. 아산과 진천의 주민께서 따뜻하게 맞아 주셨듯이 임시생활시설이 지정되는 해당 지역주민께서도 넓게 이해하고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협력과 배려가 또 다른 미담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살아나던 경제에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며 수출과 관광, 생산과 소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상생협력으로 돌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업이 중단된 중국 현지 부품공장을 조기에 정상 가동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로 뛰며 협력하고 있고, 정부가 신속히 인가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노동자도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업종별·기업별·지역별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들도 감염병 극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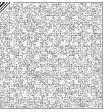
제7회 국무회의

2020. 2. 18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에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완치되어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어 보호받던 우한 교민들은 지난 주말 모두 건강한 상태로 퇴소하였습니다. 국민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



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산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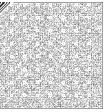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 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 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2. 24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특별히 감염병 관련 학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부의 상황 판단과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달라진 코로나19 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 민간 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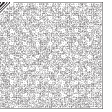
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입니다.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됩니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피해 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업인,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합니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비상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선봉에 서서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대책 시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과 국민의 소비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역량입니다.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국민께서는 상상 이상의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임대료 인하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사회적 연대가 서울의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수원, 속초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9회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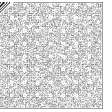
2020. 3. 3

오늘 국무회의는 확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해 개최합니다. 국무총리가 계시는 대구와 세종청사, 시·도지사님들을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시·도지사님들은 긴급한 일이 있으면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과 대단히 이례적인 높은 감염률이 우리 방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방역 전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듯이,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인원을 검사하면서 그 결과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역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에 따라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폭 총원하고 있고, 병상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감염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경증환자는 별도의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입원·치료하는 체계로 바뀌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조



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장 어려운 대구·경북 지역에 연대와 지원의 손길을 보내면서 지역사회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지역 방역 당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 치료에도 더욱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생산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산업체들이 생산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에 최대한 지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공적 유통체계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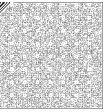
바랍니다.

감염병 대처에 온 사회가 방역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역 체계는 뛰어나고, 방역 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들이 있고,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와 응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전념할 때입니다.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경제상황이 엄중합니다. 경제심리가 얼어붙어 투자와 소비,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으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긴급하고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종합지원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바이러스연구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국민안전과 경제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



립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
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각 부처에 당부합니다.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를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본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해 주기 바
랍니다. 특히 모든 부처 장관님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경제
의 중심에 서 주기 바랍니다. 시·도지사님들도 필요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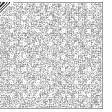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20. 3. 9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어제
3월 8일 248명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계속 이어
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
이고 안정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
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민께서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잘 협조해 주
셨습니다.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행동들이 일각에서 있
었지만, 국민께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
가짐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오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
진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전적으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의 힘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은 금물입니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
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더 큰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아직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세계적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조짐에 대해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양상을 보면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과 종교행사 등 다수의 밀집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의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시설부터 전수조사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종교 등 다중밀집 행사는 국민께서 조금만 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게도 많은 종교단체들이 잘 협조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감염상황이 다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방침과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5부제는 여러모로 불편하실 것입니다. 1인당 1주 2매의 분량이 부족한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입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지만 아직 공급량이 부족한데다 방역현장과 의료진,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가면서 5부제를 운영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량을 신속히 늘려 5부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마스크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방역 당국이 권장하는 마스크 사용지침을 많이 참고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부터 보건용 마스크가 권장되는 경우 외에는 먼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제13회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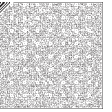
2020. 3. 17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어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입니다.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게제가 아닙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장 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32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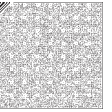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

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제기반이 와해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16회 국무회의

2020. 3. 31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멉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는 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집단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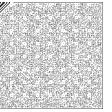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독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험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 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합니다.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 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취했고,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경제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대응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입니다.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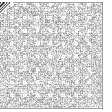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20. 4. 13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기법은 국제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방역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시스템과 일상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입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께 있습니다.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방역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안정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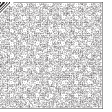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입니다. 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특단의 대책을 실행하지 않고 세워야 합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입니다.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주

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일 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18회 국무회의

2020. 4. 14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국민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처리하여 국민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직은 위기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끝 너머를 내다보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며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키워 왔습니다. 특히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대응과 국민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한국형 방역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한국산 방역물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확산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우리 국민의 역량이 만든 결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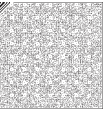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한편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하여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의 바이오·의약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3대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살려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연구·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 주력산업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오일쇼크 위기 속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기회를 만들었듯이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중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의 위기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이미 초국경적인 문제이며, 국경의 장벽을 쌓고 이동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며,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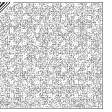
오늘 오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화상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방역협력과 경제협력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정부는 두 분야 모두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전 지구적 도전에서 각자도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연대와 공조, 개방만이 승리의 길임을 분명히 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입니다. 분명 두려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승자는 변화를 기회로 만든 자의 몫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4. 20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국난극복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나서야 다음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도 국난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와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 피해와 경제·사회적 피해는 3차 세계대전이라 불려도 될 만큼 막심하고 혹독합니다. 이미 16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고,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최전두에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한 번도 지지 않은 국민입니다. 이번에도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먼저 열어 나간 선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난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 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방역에서부터 세계에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가장 신속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

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투명성·개방성·민주성에 기반한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확연히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방역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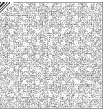
일부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은 완전한 종식의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임을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에서도 전 세계에 위기 극복의 저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 짓고, 선제적이며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고용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며 많은 국민께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역에서 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제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장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면서도 OECD 36개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의 방역 성과와 과감한 경기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 기조를 이어가야 합니다.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위기가 끝날 때까지 위기 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구호 등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경제난 극복대책에서 과거의 해법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방역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창의적 사고와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위기 극복의 시간을 단축해 나갈 것입니다.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국민을 믿고 난국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극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도,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국난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어야 합니다.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야당의 의견에도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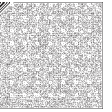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20. 4. 27

남북의 정상은 역사적 판문점선언을 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고, 두 정상은 합의한 판문점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9·19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져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되었고,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판문점선언의 실천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과제입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하였고, 나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입니다. 남북 생명공동체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하여 가축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재난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루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희망의 지대로 바꾸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다지는 데 있을 것입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사업은 전쟁의 상처를 씻고,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이므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의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 가치이기도 합니다. 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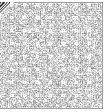
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발전하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이상 10명 내외로 확연히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집단지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확진자라 하더라도 언제 집단감염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 상황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올가을 또는 겨울에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바이러스와 불편한 동거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게 보면서 이제는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방역모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으로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동시에 일상으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총선을 평소보다 더 높은 투표율로 안전하게 치러낸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세계는 이번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방역을 넘어 K일상이 또 다른 세계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가 복귀할 일상은 과거의 일상과 다른 낯설고 새로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실험입니다. 방역과 일상을 함께 잘 해내려면



국민의 협조와 참여 이상의 비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을 믿고 새로운 일상을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기회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살려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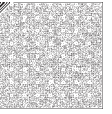
제22회 국무회의

2020. 4. 28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에 신속 과감한 비상조치로 대응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지원과 함께 주력 기업과 기간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금융 조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내용과 규모 면에서 모두 파격적이며 전례 없는 조치들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처방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항공·해운·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출도 3월까지의 최대한 버텨 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 체



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활력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께서는 방역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안전성이 유지되면, 내수도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더욱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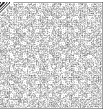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더욱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

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수 반동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비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더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루어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지금 자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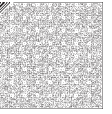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20. 5. 4

지금 이 시간에도 황금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휴식과 위안을 주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와 함께 적절한 거리두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물류센터의 참혹한 화재사고로 많은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관계부처는 성심을 다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 보상 등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의 형태로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008년 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화재 안전대책을 강화해 왔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 주



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고처럼 대형화재 가능성이 높은 마무리 공정상황에 특화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고성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거세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비교적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협조 덕분에 작년과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산불에 비해 피해면적도 크게 줄었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되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고,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에 따라 산불진화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년 강원도 산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산불대응시스템을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대원들, 강원도와 고성군 공무원들은 물론 군장병들까지 산불 진화에 헌신적으로 나서 준 노고를 치하합니다. 신속히 대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며,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280만 가구에게는 신청하는 수고 없이 오늘부터 본인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이체됩니다. 온라인이 편리한 대다수 국민께서는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신청

이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5부제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께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온 국민께서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입니다.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입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입니다. 많은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극복의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난극복의 힘을 모으려는 국민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한 곳, 어려운 국민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수석·보좌관회의 / 국무회의)
2019. 5. 10 ~ 2020. 5. 9

발행	대통령비서실
편집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2020년 6월 5일
인쇄·제본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